

「제10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」의 불신임을 요구한다!!

수신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

발신 : 총여학생회 후보를 반대하는 사회대 여학우 모임

이번 「제10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(이하 중선관위)」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돼 선거관리를 맡게 됐다.

그러나 중선관위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외면한 채 편파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을 해왔다. 이에 우리는 중선관위의 불신임을 요구한다.

1. 자보 철거의 문제

3월 21일, '총여학생회 후보에게 반대표를'이라는 제목의 자보가 붙어 있었다. 그런데 중선관위 이름으로 그 자보가 뜯겨졌다. 자보를 쓴 '총여학생회 후보를 반대하는 사회대 여학우 모임'은 통보도 받지 못했고 지켜보고 있던 어떤 학우가 긴급히 글 쓴 이에게 뽀빠를 쳐서 알게 됐다.

▶ 자보를 뜯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을 뜯어낸다는 의미 이상일 것이다. 자보는 의사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,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철거될 수 없다. 작년 한총련 사태 이후, 교수님들이 낫을 들고 학생들의 자보를 강제 철거한 권위주의적인 발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**정치적인 발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폭력적인 행위인 것이다.**

▶ 중선관위원장은 내용에 문제-선거법 위반-가 있다고 하면서 자보를 철거한 것이다. 그러나 이후 사회대 모임 학우들이 다시 확인해 본 결과, 선본이 아닌 일반 학우들은 시행세칙에 따를 필요도 없을뿐더러, 설령 그러하더라도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.

▶ 사회대 여학우 모임은 중선관위가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, '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'라는 한 마디만 했을뿐, 오히려 '경고'에 가까운 자보를 붙였다. **분명,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보를 중선관위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자보철거를 감행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.**

2. 중선관위는 그 동안 편파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.

▶ 중선관위는 선거에 관해 제반사항을 심의,결정하는 하는 기구이다. 그러나 이전까지 어떠한 중선관위에서도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함부로 자보를 뜯어내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보호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. 선거 시행세칙을 준수했다고 한다면 먼저 회의를 소집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고 일반학우들의 선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선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, 그래서 중선관위가 이를 검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.-이 때의 유권해석도 충분한 판례와 일반적인 합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.- 그 다음에야야 각각의 개인에게 중선관

위의 결정을 알리고 경고조치할 수 있을 뿐이다. **위 자보에 대해서는 중선관위 회의가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.**

중선관위는 총학생회장, 제9대 총여학생회장, 사회대 학생회장, 동연학생회장으로 구성돼 있는데, 총학생회장 혼자 독단적으로 '의결'을 하고 직접 뜯어내는 '집행'까지 한 것이다. 이후 다른 중선관위 위원들에게 알아본 결과, 자보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.

중선관위 위원장인 총학생회장은 자신이 다른 위원들에게서 권한들을 위임받았다고 하나,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. '위임' 자체도 불신임의 내용이 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위원들이 그러한 적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. 그들은 그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.

▶ 선거 포스터를 붙이는 장소와 부수를 중선관위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위원들에게 전화로 '사후 동의를 얻었다'고 한다. 중선관위의 모든 의결은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.

▶ **중선관위 회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명 중 과반수인 3명이 참석해야 한다. 그러나 여태까지의 중선관위 회의는 2명 내지는 '한 명'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. 즉, 회의가 성립되지 않은 채 중선관위장의 임의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.**

위원들은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을 할 의무가 있다. 안일하게 회의에 참석치 않고 독단적으로 위원장 1인에게 가당치 않은 '위임'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중선관위 위원 전체를 불신임하지 않을 수 없다. 또한 독단적인 문제해결을 행정 편의주의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중선관위원장의 관료적인 태도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.

이에 우리는 중선관위 전체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하고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한 투명한 회의진행과 회의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.